

광주 1·전남 1·전북 2곳 감소 우려...‘호남 26석’ 입지 축소 ‘불 보듯’

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지역구 244~249개 범위서 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244~249개 범위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대 2곳의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광주·전남의 의석수는 현행 19석(광주 8, 전남 11)에서 17석(광주 7, 전남 10)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집단 반발 등으로 획정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년 총선 지역구 규모는=일단 획정위가 244~249개의 지역구 숫자를 제시함에 따라 이 범위내에서 정해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현행 246개의 지역구를 유지하거나 최대치로 제시한 249개의 지역구 숫자를 최종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수를 줄여더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농어촌 대표성 등을 명분으로 지역구 숫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의 현행 유지나 확대를 주장해왔던 새정치연합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결국 획정위의 최종안대로 지역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새정치연합 정계특위 간사인 김태연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가진 획정위가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획정위 결정에 따른 수박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구는=최대 2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남에서 8월 말 현재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모두 4곳이다. 여수 갑과 무안·신안, 고흥·보성, 영암·장흥·강진 등이다. 여수 갑은 여수 읍과의 경계 조정을 통해 현행 2곳의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 하

영남은 최대 5석 줄어도 62석

농어촌 반발...국회서 조정 가능성

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세 곳의 지역구를 조정, 두 곳의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전남의 지역구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광주 동구는 현재까지 지역구 유지가 불투명하다. 인천 계양-강화를 등 현행 4군데로 규정된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광주 동구를 인접 지역구 일부와 합쳐 단독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획정위가 수도권 분구 인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수 갑·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부산 각각 1곳, 강원 1곳, 광주·전남이 2곳, 전북 2곳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가 각각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이 각각 4석 안팎이 줄어들어 엇비슷하게 된다는 점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 정치권 입지 축소=획정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 규모가 결정된다면 호남 정치권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현행 30석의 호남 국회의원 의석 수(광주 8, 전남 11, 전북 11)가 20대 국회에서 26석으로 줄어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영남은 현행 67석에서 최대 5석이 줄더라도 62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호남 정치권이 모은 정치적 역량을 동원, 호남 지역구 축소 최소화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호남 정치권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수까지 줄어들게 되면 호남 정치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담양 대나무박물관에 몰린 인파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 일대에서 20일 관광객들이 뱀부(bamboo·대나무)쇼를 관람하고 있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미래’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죽녹원과 전남도립대에서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정치 공천혁신 3종세트... 불안한 현역 의원들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결선투표제 호남서 파급력 클 듯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상당한 현역의원들이 물갈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혁신위의 공천혁신안 중 ▲현역의원 평가 ▲결선투표제 ▲인적쇄신이 현역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 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 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현역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애초 20일까지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공천혁신안 중앙위 처리,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당

내 분란이 커지면서 위원장 선임 인선이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평가위가 구성되는 대로 곧바로 평가작업에 들어가 가능하면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결선투표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단’이 참여하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차례의 경선을 통해 최고 득표자를 후보자로 확정하는 과거 방식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앞서고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했지만 결선투표를 하면 정치신인의 발탁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호남에서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20일 “호남은 다선 의원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 교체여론이 높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결선투표에서 현역이 대거 교체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 전망했다.

인적 쇄신도 현역 물갈이의 큰 변수다. 혁신위원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지막 혁신안 발표 일인 오는 23일 ‘제도를 넘는 혁신’을 공개하겠다고 하며 인적 쇄신 방안을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혁신위가 제과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결초보은’을 강조해왔음을 감안하면 ‘중진 용퇴론 내지 험기 출마론’,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 하방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달과 해당 행위자 등을 당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힌 것도 인적 쇄신과 연결될 수 있다.

혁신위 공천개혁소위는 비리 혐의로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키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공천 룰 오픈프라이머리+전략 공천?

원유철 원내대표 ‘제3의 길’ 제안

새누리당이 내년 4월 20대 총선의 후보공천 방식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안 제시를 압박하고, 비박(비박근혜)계는 “아직 버릴 카드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3의 길’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20일 “새누리당만의 새로운 방식의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공천권을 행사하던 과거 방식이 ‘A’이고, 오픈프라이머리가 ‘B’라면, 제3의 길은 A와 B를 혼합하되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픈프라이머리의 취지를 살리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 원내대표가 제3의 길을 거론한 게 결국 친박계의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에 동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지분을 보장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계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반기’를 든 시점에서 원 원내대표의 언급이 나오면서 일반국민 여론 조사와 책임당원 여론조사 등을 합성한 경선 방식에 일부 전략공천을 가미하는 형태의 대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직은 아이를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문만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엄마’ 하며 아이가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낯이 나간 채 몇 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를 잃는다는 건 모두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종아동 관련정보 및 제보는 국번없이 18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실종아동전문기관 (www.missingchild.or.kr)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www.safe182.go.kr)에서 정보열람 및 제보 가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